

European Commission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July 2022

2022. 8.



본 보고서는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2022.7)한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An Overview, with an 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연구진

- 김우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이정인 선임연구원
- 지윤서 위촉연구원

● 목 차 ●

I. 2021년 재정 동향	1
1. 경제 동향	1
2. 재정 동향	2
II. 2022년 및 2023년 재정 전망	4
1. 경제·재정 전망	4
2. 재량적 조치	7
3. 재정기조	10
III. 유로지역 재정기조 및 정책조합	16
1. 재정부문	16
2. 통화부문	18
3. 정책 조합	19
부록 1. 채무지속가능성 분석	22
1. 서론	22
2. 단기 리스크	22
3. 중기 리스크	24
4. 장기 리스크	26

I. 2021년 재정 동향

1. 경제 동향

■ 긴밀한 정책협조를 바탕으로 EU 경제는 2021년 강한 회복력을 보임

○ (정책 대응) 재정준칙인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일반 면책 조항(The general escape clause) 적용 및 보조금 예외 허용(State aid temporary framework)을 통해 전 회원국 대상 대규모 재정지원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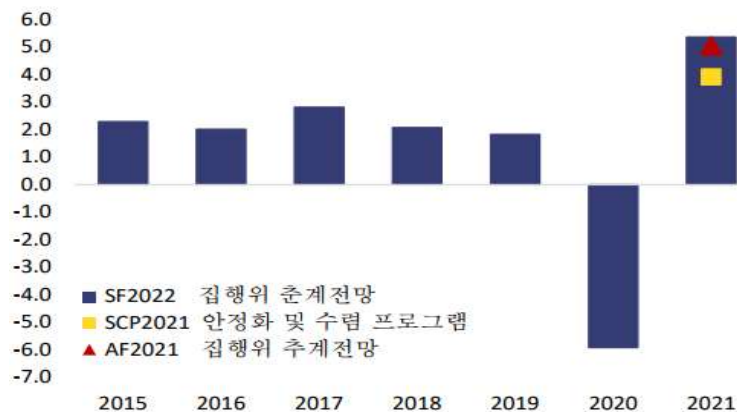
- 또한, 노동자·기업 영향 완화를 위한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d Emergency: SURE) 자금 집행 및 회복·복구수단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을 포함한 코로나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활용을 통해 경제회복을 강하게 견인

○ (경제 동향) EU의 GDP 성장률은 내수 및 대외부문 호조에 힘입어 2020년 -5.9%에서 2021년 5.4%*로 증가

* 동 수치는 2021년 집행위원회 추계 경제전망의 GDP 성장률 전망치(5%)와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SCPs) 성장률 전망치(3.9%)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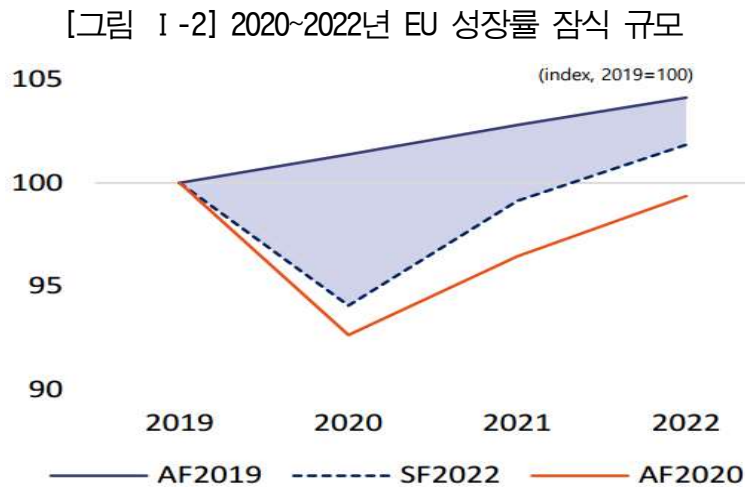
- 가처분소득 증대 및 저축률(2020년 역대 최고치 기록) 감소로 민간소비 3.8% 증가, 기업 금융여건 완화, RRF 지원, 건설부문 활성화로 민간투자도 4.2% 증가
- 수입 대비 빠른 수출 회복이 경제 활동 촉진 요인으로 작용

[그림 I -1] 2015~2021년 EU GDP 성장률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1.1.

- 다만, 누적 경제성장률의 대규모 잠식(cumulated output loss)은 불가피
 - 2020년 집행위 추계 전망(AF2020) 대비 2020년 및 202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5%p, 2.7%p 높았으며, 2021년 3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9년 집행위 추계 전망(AF2019) 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침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누적 성장률 감소 규모는 2020~2022년 기간 13% 이상일 것으로 전망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1.2.

2. 재정 동향

가. 재정수지

- 거시경제 여건 호조로 2021년 EU 공공적자는 큰 폭으로 감소
 - 자동안정화장치 효과와 함께 세수 규모 및 구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지출 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회복 지원 조치 도입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한편, 코로나19 대응 임시 긴급조치의 영향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
- 양호한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

- 전 회원국의 2021년 재정적자는 2021년 SCPs 계획 대비 개선*을 보였으며, EU 총 재정적자는 2020년 6.8%에서 2021년 4.7%**로 감소
 - * 7개국(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스웨덴)이 2021년 재정수지 목표치 GDP 대비 4%p 이상, 3개국(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이 0~1%p 이상 초과 달성 등
 - ** 8%로 예상했던 2021년 SCPs 전망과 큰 차이를 보임
- 재정준칙 상 재정적자 관리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국가는 전년대비 10개국 감소 (2020년 25개국 → 2021년 15개국)
- 전년대비 가장 큰 재정적자 감소를 보인 국가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이며, 라트비아 및 슬로바키아는 재정적자 증가, 불가리아 및 체코는 재정적자 규모 유지

나. 정부채무

- EU의 GDP 대비 총 정부채무는 2020년 역대 최고치인 92% 기록 후, 2021년 SCPs 전망치(95%)보다 낮은 수준인 90%로 감소
 - 채무비율 감소는 GDP 성장률 증가 및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GDP 디플레이터 효과에 기인
 - 기초재정수지는 2020년 대비 적은 수준이나 계속해서 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자지출로 인한 채무 증가 영향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
 - 재정준칙 상 정부채무 관리 기준인 60% 초과 국가는 총 14개국이며, 이 중 7개국(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은 100% 초과
 - 4개국(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포르투갈)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7%p 이상 하락, 7개국(독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은 유지

II. 2022년 및 2023년 재정 전망

1. 경제 · 재정 전망

가. 경제

■ EU 경제는 2021년 대비 둔화된 속도로 2023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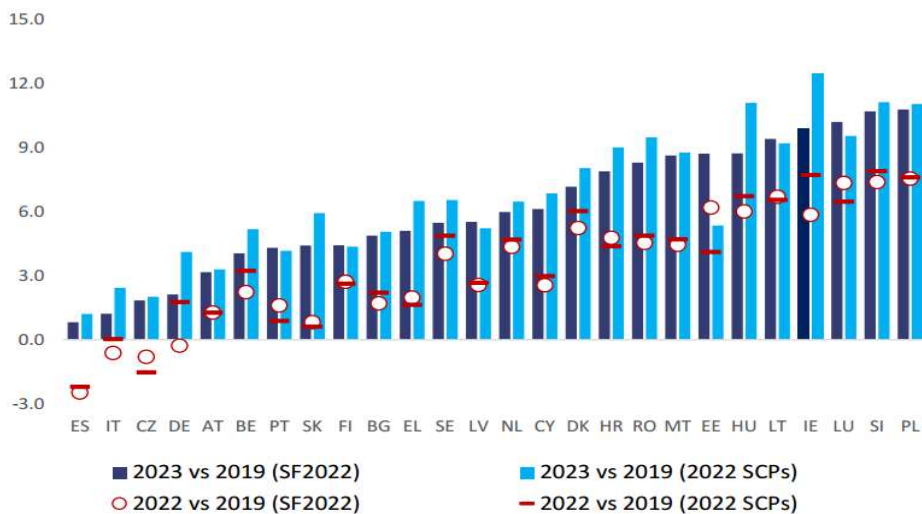
- 올해 집행위 춘계 경제전망(SF2022)과 SCPs*는 각각 2022년 EU 경제 성장률을 2.7% 및 3.5%로 전망하며 성장 둔화 예상

* SCPs 전망은 EU 각 회원국의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FIs)를 통해 진행됨

- SCPs 전망치에는 전망 시점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미반영되어 있으며, 집행위 전망상 상당한 하방리스크가 상존함을 고려할 때 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체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제외한 전 EU 회원국들은 2022년까지, 해당 4개국은 2023년까지 2019년도 GDP를 초과할 전망
 - 단, 국가 간 성장률 격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

[그림 II -1] 2019년 대비 2022년 및 2023년 GDP 변화

(단위: 2019년 GDP 대비 비율)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2.1.

나. 재정수지

■ 집행위 및 SCPs 모두 2022~2023년 EU 회원국 2/3 이상의 재정적자 감소 예상

- (집행위 전망) 집행위는 추가적 정책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약하지만 지속되는 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대응 임시 조치 축소로 EU의 GDP 대비 총 재정적자가 2021년 4.7%에서 2022년 3.6%, 2023년 2.5%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2022년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완화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을 위한 신규 조치가 재정적자 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
 - 2023년 재정준칙 상 재정적자 관리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국가 수는 총 11개국으로 예상
- (SCPs 계획)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완화 조치들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재정적자 감소세 지속 전망
 - 2022년과 2023년 EU 총 재정적자 규모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산정
 - 2023년 재정수지 개선 계획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6개국 중 25개국에서 모두 2019년도 수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SCPs 계획 상 2024년 및 2025년에 추가적인 적자 축소 추진 전망

- 2024년 EU 총 재정적자를 GDP 대비 0.4% 축소, 2025년 0.5% 축소 목표
 - 이는 경제회복 지속 기대 및 중기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까지 증액이 계획된 순 기초지출(net primary current expenditure) 조정을 반영한 것
- 모든 SCPs는 2025년까지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를 계획

다. 정부채무

■ 2022~2023년 기간 EU의 총 GDP 대비 채무비율은 감소할 전망

- (SCPs 전망) 2022년 82.2% → 2023년 80.5%로 감소
(집행위 춘계 전망) 2022년 82.1% → 2023년 80.4%로 감소

- SCPs 및 집행위 모두 2023년 말까지 채무비율이 100%를 크게 상회하는 국가는 코로나19 이전 3개국(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5개국(벨기에, 스페인 추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

■ 이자율-성장률 간 차이가 우호적 양상을 보이며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를 통해 2022~2025년 기간 GDP 대비 채무 비율 감소 견인

* 연간 채무누적비율에 대한 이자지출 영향과 채무비율에 대한 실질 GDP 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효과

- 이자율은 장기적으로만 채무비용에 영향을 끼치고, 명목 GDP 증가 및 높은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규모 채무감소 효과 예상
- 예상되는 기초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2025년까지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네덜란드의 채무는 현 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채무 상승을 유발하는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으로 인해 불가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핀란드의 채무비율 역시 2021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

라. 제언

■ 불확실성 고조, 전쟁으로 인한 강력한 하방리스크 상존, 전례없는 에너지 가격 폭등 및 공급망 교란 지속이라는 현 상황을 감안, 2023년까지 안정성장협약의 일반 면책 조항 적용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쟁 여파로 유럽 경제는 아직 정상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일반면책조항 적용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동 조항 적용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광범위 지원에서 임시적이며

선별적인 조치 시행 및 중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시의적절한 재정정책 운영 여력을 제공할 것임

- 따라서 2023년까지 동 조항의 적용 연장 후 2024년 해제함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위는 여름휴가 이후 2023년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상 변경 예정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2. 재량적 조치

■ (코로나19 대응 임시 긴급조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은 경제 안정화 및 가계·기업 충격 완화를 위한 임시긴급 조치를 시행

- 상당수 코로나19 대응 임시 긴급조치들은 올해 경제 회복 지원 조치로 전환될 예정으로, 재량적 재정 조치 대비 비중*이 크게 감소하며 현재 EU GDP의 0.8% 규모(2021년 3.2%)를 차지

* 2020년 90% → 2021년 68% → 2022년 21%

- 이는 EU 내 성공적 백신 캠페인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해석되며, 재정 지원의 초점이 회복 및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대응으로 점차 옮겨가며 동 조치들은 2023년 단계적 폐지될 전망
- 코로나19 대응 임시 긴급조치 중 상당 부분이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RE)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한 회원국 대출(back-to-back loan)을 통해 이뤄짐
 - 19개국을 대상으로 940억유로(2020년 수혜국 GDP 합계의 1.7% 규모) 이상이 지원 되었으며, 최근 7개국이 560억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 요청 의사를 밝힘
 - EU 회원국들은 가계·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뿐 아니라 정부보증(state guarantee) 및 세금 유예 등의 형태로 유동성 확보를 지원 해 왔음
- 다수 회원국이 철회 중임에도, 신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신규 제한조치 발동 등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중
- 동 조치의 재정영향은 8개 각 회원국 GDP의 1% 이상, 7개국의 0.5~1% 규모 등이며, 3개국(헝가리, 폴란드, 덴마크)만이 올해 중 완전 철회를 예상

■ (회복 지원 조치) EU 경제의 회복 궤도 진입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한 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EU 총 GDP 대비 1.4% 규모에서 2022년 2.3%로 증가 후 2023년 2.1%대 유지 전망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회복 지원 조치 중 약 3/4 규모를 국가별 2022년 및 2023년 예산으로, 1/4 규모는 RRF 재원으로 충당

- 예외적으로 고채무 국가 중 그리스 및 스페인, 중/저채무 국가 중 크로아티아 및 슬로바키아의 경우 대부분의 회복 지원 조치를 RRF 재원으로 충당하며, 루마니아 및 포르투갈은 예산과 RRF 재원을 각각 절반 비율로 활용 예정

○ EU 회원국은 2022~2023년 중 특히 RRF 자원 활용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집행위 춘계 전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RRF 재원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며, 동 기간 RRF 자원 활용 지출은 7개국 각 GDP의 1% 이상, 5개국 2% 이상, 3개국 3% 이상일 것으로 예상
- RRF 관련 지출은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및 對러시아 화학연료 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규모 투자 실행을 견인할 주요 동력이 될 전망

* 기후 중립화 및 디지털화

■ (에너지 관련 조치) 에너지·상품가격 상승 가속화 대응을 위해 각 회원국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동 조치들의 재정적 영향은 증가할 전망

○ 2021년 말 글로벌 경제활동 재활성화 및 공급망 병목현상의 동시 발생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가계·기업 영향 완화를 위해 EU 총 GDP 대비 0.1% 규모의 조치가 시행됨

○ 2022년 화석연료 수출 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재차 상승 압력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 총 GDP 대비 0.5% 규모의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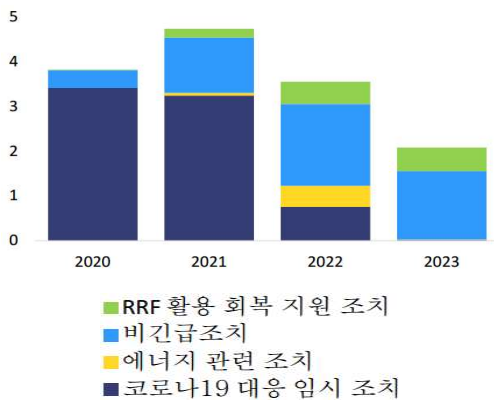
* 2022년 시행된 총 재량적 재정조치의 14% 규모로, 간접세 조정, 에너지 제품 사용 및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에너지 시장 내 가격 상한 설정 등을 시행

○ 동 조치의 재정영향은 12개국 각 GDP 대비 약 0.5~1%, 3개국 3% 이상 등이며, 슬로바키아는 2021년 및 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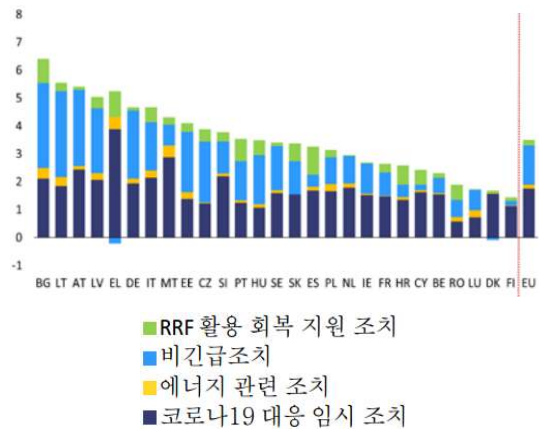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들은 SCPs 상 2023년에 상당수의 조치들을 철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조치의 비중은 EU 총 GDP 대비 0.01% 규모로 축소될 전망

- 에너지 관련 조치들이 임시적이며 취약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형태일 경우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동 조치들은 에너지 효율 및 녹색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공급 및 수요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속시키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함
-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조치) 우크라이나 난민 조치 시행으로 추가 재정비용 소요가 예상되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2022년 집행위 춘계 전망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규모가 2022년 말까지 600만명에 달한 후 2023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며, 이들의 고용률은 평균 8%(2022년)에서 20%(2023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에 따르면 현금지원 및 주거, 교육 등의 제공에 따른 난민 한 명당 연간 재정비용은 약 1,200유로~19,000유로 사이 규모로, 향후 난민들의 취업 및 현금지원 축소에 따라 절반으로 감소할 전망

[그림 II -2] EU 전체 재량적 조치 비중
(단위: GDP 대비 %)



[그림 II -3] EU 국가별 재량적 조치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2.5. 및 2.6.

3. 재정기조

가. 재정기조에 대한 권고

- 집행위는 각 국가의 재정정책 건전성 및 녹색·디지털 전환 목표와의 재정 구성 부합 여부 평가에 있어 국가별 기초지출* 및 투자 흐름에 주목

* 재량적 수입 조치(revenue measures) 및 코로나19 관련 임시긴급조치를 제외한 지출

- 최근 높은 불확실성 속 재정정책 제언이 질적연구에 기반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기초지출 및 투자에 대한 지침은 다르게 제시되어 왔음

- (기초지출) 2022년 기초지출 증가는 중/저채무 국가에서는 통제(control), 고채무 국가에서는 제한(limited)되어야 하며, 2023년에는 중/저채무 국가의 경우 중립적 정책기조에 맞추되 고채무 국가들은 중기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
- (투자) 모든 EU 회원국은 투자 지출을 지속해야 하며, 특히 고채무 국가들은 신중한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 투자 자원 조달을 위해 RRF를 활용할 것을 권고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완화 및 탈화석연료 전환을 위해 2030년 까지 EU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확보하고, 對러시아 연료 의존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녹색·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회복·복구 계획(Resilience and Recovery Plans: RRP)의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실행이 필요함

- 재정정책은 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이 필요하고, 에너지 위기 영향 완화를 위한 선별적 조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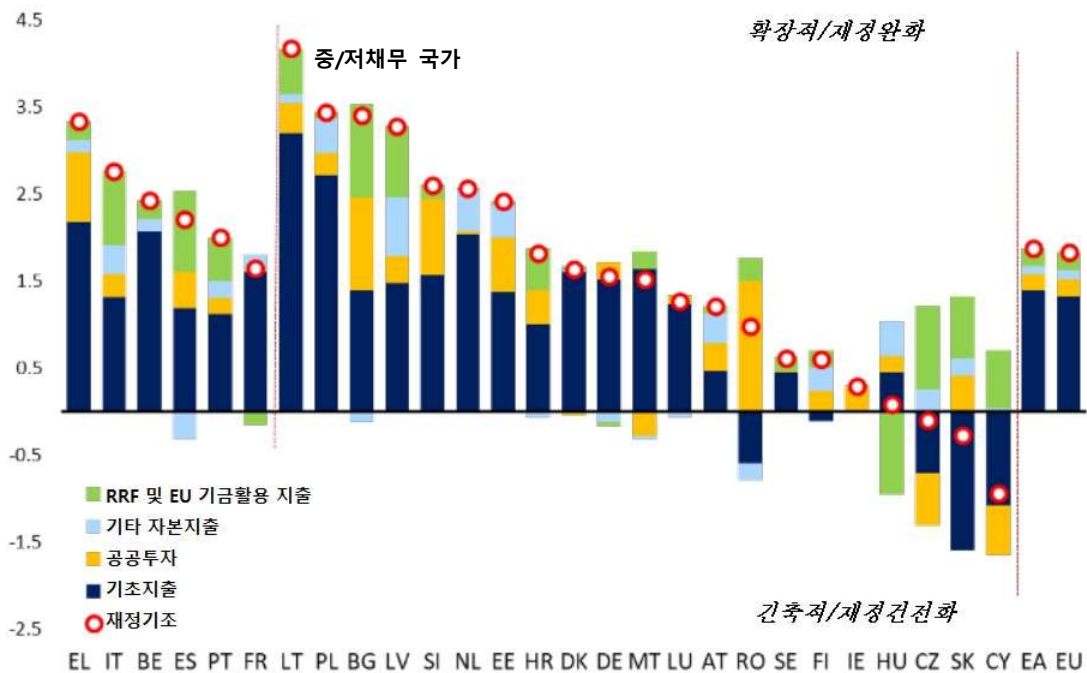
나. 국가별 정책기조 전망

- (2022년) 회원국별 예산 및 EU 전체 예산을 고려한 종합적 재정기조는 EU 대부분 국가들에 있어 확장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집행위 춘계 전망에 따르면, 22개국이 연평균 최소 GDP 대비 0.5% 규모의

- 재정 확장을 통해 명확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키프로스, 체코, 헝가리 3개국은 중립적 정책기조 계획
- 건전한 재정정책을 권고받았던 고채무 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지출 및 세금감면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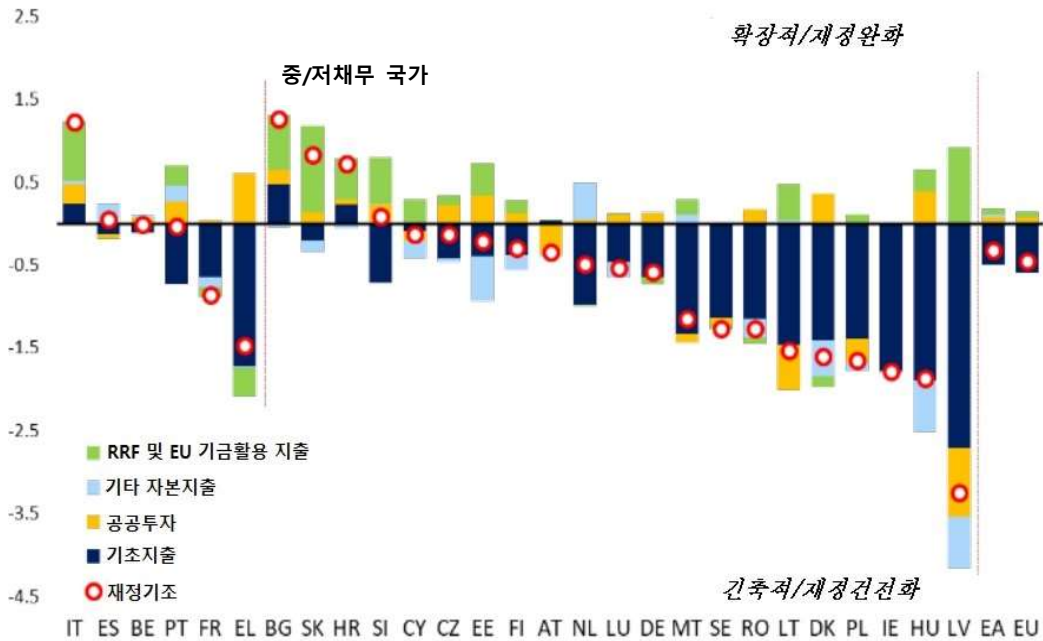
[그림 II -4] 2022년 EU 회원국별 재정기조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2.8.

- (2023년) EU 회원국의 약 절반 정도는 추가적 정책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명확한 긴축적 재정기조 전망
 - EU 회원국 중 14개국은 최소 GDP 대비 0.5% 규모의 명확한 재정긴축 예상
 - 투자 규모 감소 예정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투자와 RRF 및 여타 EU 기금 활용 지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회복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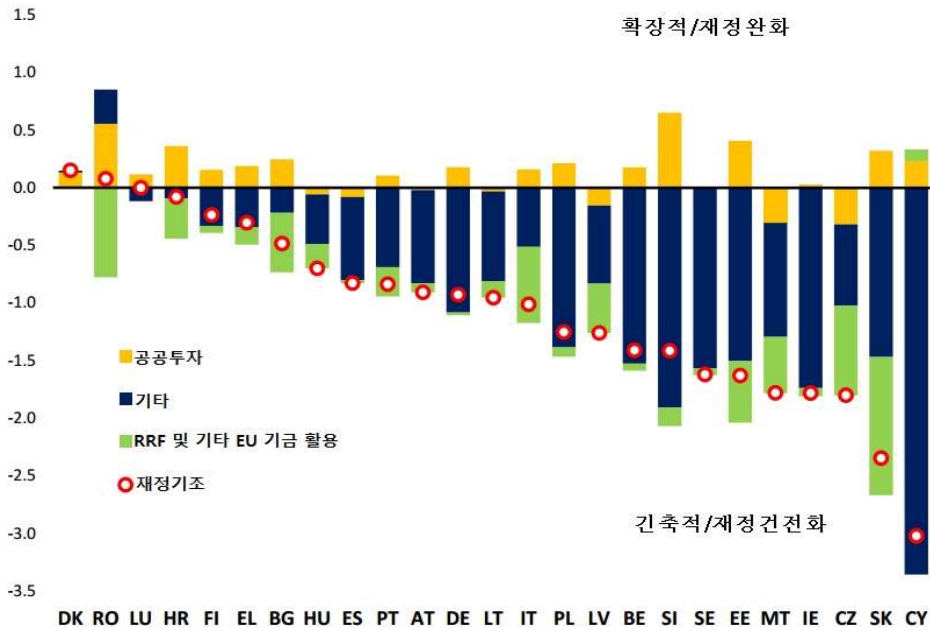
[그림 II -5] 2023년 EU 회원국별 재정기조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2.9.

- 단, 상기 전망은 인플레이션 변동성 및 불확실성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내포
 - 에너지 가격 정책은 고물가 및 성장률 저조가 지속될 경우 장기간 유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리스크 실현 가능성도 상존
- (2024년~2025년) EU 회원국들의 전반적 재정기조 긴축 전망
 - 2023년 이후 회원국은 건전한 중기재정목표 달성을 추구해야함
 - SCPs 상 중립 기조를 계획하고 있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루마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긴축 기조를 계획하고 있음
 -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채무 국가들은 SCPs 상 2024~2025년 투자 확대 및 기초지출 축소 방침

[그림 II -6] 2024~2025년 EU 회원국별 평균 재정기조 전망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2.12.

다. 재정기조 구성

1) 지출

■ (2022년)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순 공공지출 확대 전망

○ 회원국 중 2/3는 기초지출(primary current expenditure) 증가율이 EU 전체 재정기조에 2020~2021년 EU GDP 대비 0.25% 규모, 2022년 1.5% 규모의 적자 증가(확장적) 영향을 미치며 중기 잠재성장률을 초과할 전망

○ 집행위 준계전망에 따르면 고채무 국가인 벨기에 및 그리스는 2022년에 지출 증가율이 중기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며 재정기조에 GDP 대비 2%p 규모의 확장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회복 지원 조치 및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 대응 조치를 포함

■ (2023년) 에너지 관련 지원 조치가 2023년까지 대부분 철회된다는 가정 하에, 회원국 대부분의 순 공공지출은 GDP 대비 최소 0.5% 축소될 예정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 기초지출은 축소되어 전반적 재정기조에 최소 0.5%p 규모의 긴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기초지출로 인한 긴축적 영향은 2023년 대부분 철회될 예정인 에너지 관련 지원 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2023년에도 지속된다면 관련 조치들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 순 기초지출 감소에 따른 명확한 긴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를 제외한 고채무 회원국들의 지출 증가는 에너지 관련 지원 조치가 예정대로 철회된다는 가정 하에 중립적이거나 긴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여타 고채무 국가들은 대체로 중립적(프랑스, 포르투갈)이거나 확장적(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
- 중/저채무 국가들은 기초지출 증가를 2023년 중립 기조에 맞춰 조정하고, 고채무 국가들은 2023년 중기 잠재성장률 이하로 순 기초지출 증가를 제한해야 함
 -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는 평균적으로 2022~2023년 GDP 대비 0.5% 이상의 확장적 지출이 예상됨
 - 체코, 아일랜드,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동 기간 지출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평균 0.5%p의 긴축적 영향을 받을 전망

2) 투자

- 2022~2023년 공공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1/4 규모의 투자가 RRF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
 - 질높은 공공투자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회복을 보장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 RRF 재원 활용 투자를 통해 각국의 재정적자 및 채무 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질높은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생산성 증대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며, 2026년까지 EU 경제 내 대규모 필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
 - EU의 총 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은 2019년 3%에서 2023년 3.5%로 증가할 전망으로, 키프로스, 프랑스, 라트비아, 몰타,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팬데믹 이전 대비 공공투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
 - 현 계획상 각국의 개혁과 투자는 상당부분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화 관련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RRF 자금 활용을 통해 국경간·국가별 인프라 계획

및 자금조달, 에너지 프로젝트와 개혁을 지원할 예정

- 이러한 계획들은 RRF 및 여타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확대를 권고한 정책 제언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III. 유로지역 재정기조 및 정책조합

■ 유로지역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중요함

- 유로지역은 충격에 대해 단일한 통화 정책과 19개국 각각의 재정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간의 상호의존성이 더 높게 나타남
- 통화정책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재정정책이 중기 지속가능성에 집중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함
-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인 2%에 잘 고정되도록 해야 하고, 재정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수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함

1. 재정부문

■ 2022년 유로지역의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

- 2021년 유로지역의 재정정책은 순기초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RRF와 기타 EU 기금을 통한 지출이 뒤를 이었음
- 2022년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가계 및 기업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이 더해지며 순기초지출의 확장적인 기여도가 확대되고, 공공투자지출 또한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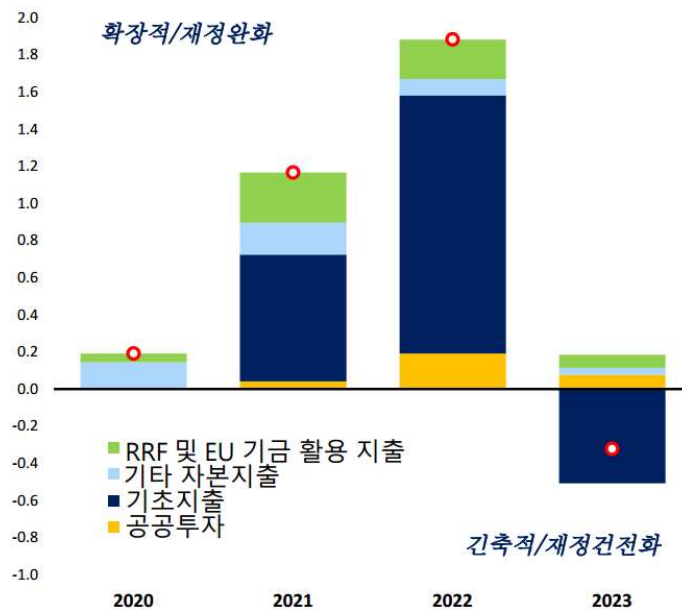
■ 2023년 유로지역의 재정기조는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될 전망

- 2023년의 재정정책은 순기초지출을 통제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함
- 2022년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023년 재정기조는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 기간 동안의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회복 기간 동안 단기적이고 선별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친환경 부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도 필요
- 재정정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
- 중기적으로 채무수준이 높은 국가는 완만한 재정건전화와 투자 및 개혁을 통해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채무를 감축해야 함

[그림 III-1] 유로지역 재정기조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3.1.

■ 높은 인플레이션은 재정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연금, 사회복지, 공공임금,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
- 재정기조는 순정부지출 증가율과 10년 평균 잠재성장률의 차이로 계산하는데, 정부지출 증가율은 물가상승률(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잠재 GDP 성장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받음
- 2022~2023년 GDP 디플레이터보다 물가상승률(HICP)이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정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더 확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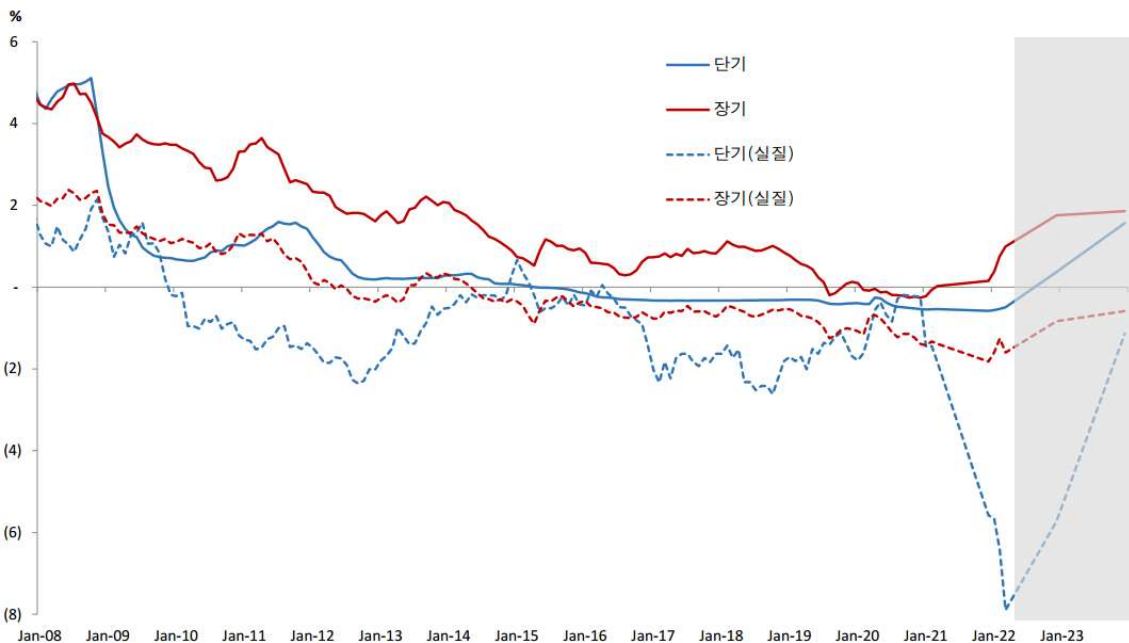
2. 통화부문

■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확장적이었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음

- 2021년 공급부문 병목현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2022년 5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HICP)은 8.1%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
-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정으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기존의 지원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함
 -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s programme: PEPP)은 2022년 3월 중단되었고,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APP)의 월간 순매입액은 4월 400억유로에서 6월 200억유로로 점진적으로 삭감됨
 -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마이너스인 정책금리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그림 III-2] 유로지역 이자율 추이

(단위: %)



주: 단기금리는 3M Euribor, 장기금리는 10년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Graph 3.3.

■ 국제 수익률(sov​er​eign bond yields)과 회사채 스프레드(corporate bond spread)로 나타나는 금리 여건이 긴축됨

- 유​로​지​역​의 10년 만기 AAA 국채 수익률은 2022년 초 이후 약 1.7pps 상승
- 회사채 스프레드는 특히 고수익 부문에서 확대되었고, 은행 대출 금리는 다소 완만하게 상승함

3. 정책 조합

■ 유​로​지​역​의 정책 조합은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상당히 전환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 공조에 더해 EU 차원의 정책 공조가 이뤄짐
 - 유​로​중​양​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재정 지원에 더해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RE: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코로나19에 따른 복구 전략 “Next Generation EU”, RRF 등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로​지​역 정책 조합의 새로운 과제

-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공급 측면의 충격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더불어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재정정책 활용이 중요함
- 기후 및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단기적·선별적 지원이 필요함
- 중기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화석 연료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로부터의 화석 연료 수입을 전환해야 함

[참고 1] 경제 충격에 대한 재정 정책 반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 흐름 중단, 러시아에 대한 금융 노출, 신뢰도 하락 등의 경로를 통해 EU 경제에 영향을 미침
 - 단기적으로 난민 유입 및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용이 발생
 -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출이 필요

- EU에서 지난 15년간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세 번의 사건이 있었음
 - 충격은 초기에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국가채무 상승으로 이어짐
 - 정책 공조의 필요성과 향후 발생할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됨

-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제적 충격의 유형을 식별하고 충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공급 부문에서 촉발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은 특정 공급 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영구적인 공급 충격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시적 공급 충격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수요 측면의 영향을 개선시킬 수 있음

-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공급 부문 충격을 특징으로 하며, 충격의 지속성 정도를 파악하여 정책 조합을 결정해야 함
 - 공급 충격이 일시적인 경우 자동안정화장치의 활용과 더불어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일시적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이 요구됨

- 공급 충격이 영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은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격과 임금 상승의 위험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어렵고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공공투자 지원은 영구적 공급 충격으로 촉발된 거시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친환경 전환을 통해 에너지 관련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현재의 공급 충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지정학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증대될 수 있지만, 각국의 재정지속가능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 공공투자는 또한 민간부문에 긍정적인 기술 파급효과를 줌

부록 1. 재무지속가능성 분석

1. 서론

■ 이 장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재무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 중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분석과 재정지속가능성 지표로 파악함
 - S0 지표는 단기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 경고 지표
 - S1 지표는 15년 내 채무를 GDP 대비 60%로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노력을 측정
 - S2 지표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노력을 측정

2. 단기 리스크

- 2021년 강력한 경제 회복과 적극적 재정지원 조치로 단기 재정지속가능성 위험이 크게 감소함
 - S0 지표에 따르면 고위험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당시 11개국이었으나, 2022년 봄에는 그리스만 고위험국으로 분류됨
 - 확장적인 통화정책 운용과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등의 정책 조치들이 재정안정화에 기여함

<표 A-1>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표

	단기 리스크	중기 리스크	S1	채무 지속가능성	S2	장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S1 indicator -overall risk assessment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 overall risk assessment	S2 indicator -overall risk assessment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벨기에	저	고	고	고	고	고
불가리아	저	중	저	중	중	중
체코	저	중	중	중	고	고
덴마크	저	저	저	저	저	저
독일	저	저(중)	저(중)	저	중	중
에스토니아	저	저	저	저	저	저
아일랜드	저	저	저	저	중	중
그리스	고	고	고	고	저	중
스페인	저	고	고	고	저(중)	중(고)
프랑스	저	고	고	고	저	중
크로아티아	저	중(고)	중	중(고)	저	중
이탈리아	저	고	고	고	저(중)	중(고)
키프로스	저(고)	중	저(중)	중	저	중
라트비아	저	저	저	저	저	저
리투아니아	저	저	저	저	중(저)	중(저)
룩셈부르크	저	저	저	저	고	고
헝가리	저	중	중	중	고	고
몰타	저	중(고)	중	중(고)	고	고
네덜란드	저	중	중	중	고(중)	고(중)
오스트리아	저	중	중	저	중	중
폴란드	저	중(저)	중(저)	저	중	중
포르투갈	저	고	고	고	저	중
루마니아	저	고	고	중	중	중
슬로베니아	저	고	고	중(고)	고	고
슬로바키아	저	고	중(고)	고	고	고
핀란드	저	중	중	저	중	중
스웨덴	저	저	저	저	저	저

-+++주: 괄호 안은 2021 채무지속가능성보고서(DSM) 분류 결과(이번 보고서에서 달라진 경우).

단기 분석은 S0 지표, 중기 분석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1 지표, 장기 분석은 DSA 분석과 S2 지표로 판단.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2, table A1.1.

3. 중기 리스크

- EU 채무지속가능성의 중기위험 전망에 따르면, 2020년대에 채무가 감소하고 이후 고령화 관련 비용 증가로 다시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EU 일반정부 채무는 2021년 GDP의 약 90%에서 2029년 약 8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율-성장률 격차가 여전히 음(-)의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고령화 비용으로 인한 지출 압력 증가로 2030년 이후 일반정부 채무가 다시 증가하여 203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82%를 기록할 전망
 - 유로존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1년 97%에서 2028년 88%로 감소한 후 다시 반등해 2032년 90%를 기록할 전망
- 채무 수준 전망 및 채무 감소의 시기, 규모, 지속성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남
 -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4개 회원국에서 2032년까지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11개 회원국에서 2032년까지 2021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몰타, 루마니아 등 5개국의 GDP 대비 채무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중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채무가 이미 높은 수준인 슬로베니아, 벨기에, 이탈리아는 2020년대 중반까지 채무수준이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32년에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스페인과 프랑스의 채무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스는 강력한 채무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기준선 전망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확률적 예측(stochastic projections)¹⁾에 따르면 EU의 채무는 2021년보다 2026년에 더

1)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경로의 분포를 분석

높을 확률(14%)이 있음

-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미 채무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채무가 상승할 확률이 크며, 그리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헝가리, 키프로스, 루마니아의 불확실성도 큼
- S1 지표에 따르면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중기적으로 높은 채무지속가능성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대 중반까지 채무가 안정화되거나 다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32년에 2021년의 채무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채무가 낮아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9개국은 중간 수준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저위험으로 분류됨
 -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는 15년 안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60%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재정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S1에 따르면 고위험으로 평가
 -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는 S1 지표에서 중위험으로 평가되나 폴란드와 핀란드는 중위험과 저위험의 경계에 위치함

■ 다양한 요인들이 재정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 채무 만기가 길어지면서 높은 시장 이자율이 실제 이자 지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에 따른 개혁의 시행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채무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책금리가 상승해 특히 채무가 많은 국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기 채무 전망은 2021년 가을 이후 다소 개선됨

- 2021년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의 전망과 비교해 2022년 봄 전망의 2032년 유럽 전체의 GDP 대비 채무는 약 8%p 하향조정됨

- 채무 전망의 하향조정은 포르투갈, 그리스,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크로아티아, 몰타, 슬로베니아의 채무지속가능성 위험 평가는 고위험에서 중위험으로 변경됨
- 이러한 전망의 개선은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전 높은 인플레이션이 채무 상환의 실효 비용에 점진적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함
- SCPs에서 제시된 계획이 온전히 이행되면 EU의 채무는 기준선 전망보다 안정적으로 감축될 수 있음
- 구조적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가채무는 전망 기간 동안 증가하지 않고 2032년에 GDP 대비 80% 미만으로 감소함
- 2021년과 비교해 2032년에 채무가 더 증가하는 국가의 수도 감소함
- 하지만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해 일부 고채무 국가의 경우 중기적으로 여전히 높은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직면함

4. 장기 리스크

- 고령화 관련 비용은 대다수 회원국에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DSA와 S2 지표를 통한 장기 위험 분류에 따르면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 고위험으로 분류됨
 - 나머지 19개국 중 15개국은 중위험으로 분류되며, 4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웨덴)만 저위험으로 분류
- 2021년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전망과 비교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고위험에서 중위험으로 변경되었고, 리투아니아는 저위험에서 중위험으로, 네덜란드는 중위험에서 고위험으로 변경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SCPs에서 제시된 계획을 이행하면 장기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표 A-2>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국가명	2022 SCPs				2022 추계전망			차이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2	2023
벨기에	108.0	108.8	109.7	110.1	108.2	107.5	107.6	0.5	1.2
키프러스	93.9	88.2	81.0	76.7	103.6	93.9	88.8	0.0	-0.6
독일	66.8	65.8	65.6	65.0	69.3	66.4	64.5	0.4	1.3
에스토니아	20.7	24.1	27.7	29.2	18.1	20.9	23.5	-0.2	0.6
그리스	180.2	168.6	155.2	146.5	193.3	185.7	180.4	-5.5	-11.8
아일랜드	50.1	46.3	43.8	40.7	56.0	50.3	45.5	-0.2	0.8
스페인	115.2	112.4	110.9	109.7	118.4	115.1	113.7	0.1	-1.3
이탈리아	147.0	145.2	143.4	141.4	150.8	147.9	146.8	-0.9	-1.6
라트비아	45.7	45.2	44.5	43.4	44.8	47.0	46.5	-1.3	-1.3
리투아니아	43.3	43.7	42.6	42.5	44.3	42.7	43.1	0.6	0.6
룩셈부르크	25.4	25.8	26.2	26.2	24.4	24.7	25.1	0.7	0.7
몰타	58.6	59.4	58.6	57.2	57.0	58.5	59.5	0.1	-0.1
네덜란드	53.1	52.7	53.1	54.4	52.1	51.4	50.9	1.7	1.8
오스트리아	80.0	77.1	74.5	72.1	82.8	80.0	77.5	-0.1	-0.4
포르투갈	120.8	115.4	109.8	105.9	127.4	119.9	115.3	0.8	0.2
슬로베니아	73.3	71.5	69.5	68.0	74.7	74.1	72.7	-0.8	-1.2
슬로바키아	61.6	58.0	58.2	57.3	63.1	61.7	58.3	-0.1	-0.3
핀란드	66.2	66.9	68.0	69.1	65.8	65.9	66.6	0.3	0.3
불가리아	25.5	27.7	29.1	30.4	25.1	25.3	25.6	0.2	2.1
체코	42.7	43.4	44.4	45.4	41.9	42.8	44.0	-0.1	-0.6
덴마크	33.3	32.5	34.0	33.9	36.7	34.9	33.9	-1.6	-1.4
크로아티아	76.2	71.7	68.9	66.9	79.8	75.3	73.1	0.9	-1.4
헝가리	76.1	73.8	70.4	66.9	76.8	76.4	76.1	-0.3	-2.3
루마니아	49.4	49.7	49.4	48.9	48.8	50.9	52.6	-1.5	-2.9
폴란드	52.1	51.5	51.0	49.7	53.8	50.8	49.8	1.3	1.7
스웨덴	33.5	30.7	28.9	26.4	36.7	33.8	30.5	-0.3	0.2
EA	90.7	89.0	87.7	86.9	93.5	90.5	88.7	0.2	0.3
EU	82.2	80.5	79.3	78.6	84.9	82.1	80.4	0.1	0.2

주: EA 및 EU 수치는 프랑스를 제외한 수치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2, table A2.1.

<표 A-3> GDP 대비 재정수지(headline balance)

국가명	2022 SCPs				2022 추계전망			차이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2	2023
벨기에	-5.2	-3.6	-3.4	-2.7	-5.5	-5.0	-4.4	-0.3	0.9
키프러스	0.0	0.4	1.5	1.7	-1.7	-0.3	-0.2	0.3	0.6
독일	-3.7	-1.9	-1.8	-0.9	-3.7	-2.5	-1.0	-1.2	-0.9
에스토니아	-5.3	-4.8	-3.8	-2.9	-2.4	-4.4	-3.7	-0.9	-1.1
그리스	-4.4	-1.4	-0.4	-0.1	-7.4	-4.3	-1.0	-0.1	-0.4
아일랜드	-0.4	0.2	1.2	1.4	-1.9	-0.5	0.4	0.1	-0.2
스페인	-5.0	-3.9	-3.3	-2.9	-6.9	-4.9	-4.4	-0.1	0.5
이탈리아	-5.1	-3.7	-3.2	-2.7	-7.2	-5.5	-4.3	0.4	0.6
라트비아	-6.5	-2.8	-2.3	-1.7	-7.3	-7.2	-3.0	0.7	0.2
리투아니아	-4.9	-2.4	-1.3	-1.0	-1.0	-4.6	-2.3	-0.3	-0.1
룩셈부르크	-0.7	-0.4	-0.3	-0.2	0.9	-0.1	0.1	-0.6	-0.5
몰타	-5.4	-4.6	-2.8	-2.4	-8.0	-5.6	-4.6	0.2	0.0
네덜란드	-2.5	-2.3	-2.5	-2.9	-2.5	-2.7	-2.1	0.2	-0.2
오스트리아	-3.1	-1.5	-0.7	-0.3	-5.9	-3.1	-1.5	0.0	0.0
포르투갈	-1.9	-0.7	-0.3	0.0	-2.8	-1.9	-1.0	0.0	0.4
슬로베니아	-4.1	-3.0	-2.1	-1.7	-5.2	-4.3	-3.4	0.3	0.4
슬로바키아	-5.1	-2.4	-2.3	-2.0	-6.2	-3.6	-2.6	-1.4	0.2
핀란드	-2.2	-1.7	-1.4	-1.8	-2.6	-2.2	-1.7	0.0	0.0
불가리아	-5.3	-2.9	-2.8	-2.4	-4.1	-3.7	-2.4	-1.6	-0.5
체코	-4.5	-3.2	-2.9	-2.7	-5.9	-4.3	-3.9	-0.2	0.7
덴마크	0.6	0.2	0.6	0.4	2.3	0.9	0.6	-0.3	-0.4
크로아티아	-2.8	-1.6	-1.6	-1.2	-2.9	-2.3	-1.8	-0.6	0.2
헝가리	-4.9	-3.5	-2.5	-1.5	-6.8	-6.0	-4.9	1.1	1.4
루마니아	-6.2	-4.4	-3.0	-2.9	-7.1	-7.5	-6.3	1.3	1.9
폴란드	-4.3	-3.7	-3.1	-2.5	-1.9	-4.0	-4.4	-0.3	0.7
스웨덴	-0.5	0.7	0.8	1.4	-0.2	-0.5	0.5	0.0	0.2
EA	-3.9	-2.5	-2.1	-1.6	-4.8	-3.5	-2.3	-0.4	-0.2
EU	-3.7	-2.4	-2.0	-1.5	-4.3	-3.4	-2.4	-0.3	0.0

주: EA 및 EU 수치는 프랑스를 제외한 수치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2, table A2.2.

<표 A-4> GDP 성장률

국가명	2022 SCPs				2022 춘계전망			차이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2	2023
벨기에	3.0	1.9	1.5	1.3	6.2	2.0	1.8	1.0	0.1
키프러스	2.7	3.8	3.4	3.0	5.5	2.3	3.5	0.4	0.3
독일	3.6	2.3	0.8	0.8	2.9	1.6	2.4	2.1	-0.1
에스토니아	-1.0	1.2	3.2	2.6	8.3	1.0	2.4	-2.0	-1.2
그리스	3.1	4.8	3.5	3.3	8.3	3.5	3.1	-0.4	1.7
아일랜드	6.4	4.4	4.0	3.8	13.5	5.4	4.4	1.0	0.0
스페인	4.3	3.5	2.4	1.8	5.1	4.0	3.4	0.3	0.1
이탈리아	3.1	2.4	1.8	1.5	6.6	2.4	1.9	0.7	0.5
라트비아	2.1	2.5	3.3	3.4	4.5	2.0	2.9	0.1	-0.4
리투아니아	1.6	2.5	3.0	3.0	5.0	1.7	2.6	-0.1	-0.1
룩셈부르크	1.4	2.9	2.9	2.6	6.9	2.2	2.7	-0.8	0.2
몰타	4.4	3.9	3.7	3.5	9.4	4.2	4.0	0.2	-0.1
네덜란드	3.6	1.7	2.0	1.7	5.0	3.3	1.6	0.3	0.1
오스트리아	3.9	2.0	1.8	1.6	4.5	3.9	1.9	0.0	0.1
포르투갈	5.0	3.3	2.6	2.6	4.9	5.8	2.7	-0.8	0.6
슬로베니아	4.2	3.0	2.8	2.6	8.1	3.7	3.1	0.5	-0.1
슬로바키아	2.1	5.3	1.8	1.8	3.0	2.3	3.6	-0.2	1.7
핀란드	1.5	1.7	1.5	1.3	3.5	1.6	1.7	-0.1	0.0
불가리아	2.6	2.8	3.6	3.4	4.2	2.1	3.1	0.5	-0.3
체코	1.2	3.6	3.2	2.4	3.3	1.9	2.7	-0.7	0.9
덴마크	3.4	1.9	1.2	0.6	4.7	2.6	1.8	0.8	0.1
크로아티아	3.0	4.4	2.7	2.5	10.2	3.4	3.0	-0.4	1.5
헝가리	4.3	4.1	4.2	4.3	7.1	3.6	2.6	0.7	1.5
루마니아	2.9	4.4	4.8	4.5	5.9	2.6	3.6	0.3	0.8
폴란드	3.8	3.2	3.0	3.1	5.9	3.7	3.0	0.1	0.2
스웨덴	3.1	1.6	1.6	1.7	4.8	2.3	1.4	0.8	0.2
EA	3.6	2.6	1.7	1.5	5.0	2.6	2.4	1.0	0.2
EU	3.5	2.6	1.9	1.7	5.1	2.7	2.4	0.9	0.2

주: EA 및 EU 수치는 프랑스를 제외한 수치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2, table A2.3.

<표 A-5> GDP 대비 임시긴급조치 규모

국가명	2020	2021	2022
벨기에	4.4	2.9	0.4
키프러스	3.6	3.0	0.4
독일	2.7	4.2	1.2
에스토니아	2.3	2.7	0.8
그리스	7.6	7.2	1.8
아일랜드	3.3	2.7	0.6
스페인	3.9	2.8	0.4
프랑스	3.3	2.6	0.4
이탈리아	4.4	3.5	1.1
라트비아	2.8	5.2	0.8
리투아니아	3.9	2.8	1.2
룩셈부르크	2.4	0.7	0.1
몰타	6.3	4.7	1.3
네덜란드	3.3	3.3	0.9
오스트리아	4.8	4.3	1.1
포르투갈	2.3	2.2	0.7
슬로베니아	5.1	3.8	0.5
슬로바키아	2.3	3.3	1.0
핀란드	2.8	1.7	0.2
불가리아	2.9	4.3	1.8
체코	3.1	2.3	0.1
덴마크	2.6	4.0	0.0
크로아티아	3.4	2.1	0.4
헝가리	4.0	0.8	0.0
루마니아	1.7	0.9	0.0
폴란드	4.5	2.7	0.0
스웨덴	3.3	2.2	1.2

자료: EU 집행위, *The 2022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2, table A2.4.